

미래를 짓다, 모두를 잇다

국토교통부 업무보고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윤덕)는 7월 16일(목) 오후, 국민이 바라는 국토교통의 변화를 실현하기 위해 「미래를 짓다, 모두를 잇다」를 주제로 핵심 추진 과제를 대통령에게 보고한다.
 - 이번 업무보고는 국민 참관단도 참여하여 국민이 체감한 정책 성과를 공유하고, 주거 불안과 지역 격차, 교통불편·안전 등 국민이 요구한 변화에 대한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.
 - 국토교통부,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, 새만금청, 국토부 산하 10개 공공기관이 참석하며, “국토대전환으로, 대체불가 대한민국”이라는 슬로건 아래 농림축산식품부·해양수산부 및 유관 기관도 참석한다.
- 국토교통부는 지역에 더 많은 일자리와 성장 기회를 만들고, 국민의 집 걱정과 이동 불편은 줄이기 위해 “4대 개혁 및 4대 전략” 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.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[개혁①: 국토공간 대개혁] 5극 3특 중심의 지방 주도 성장

- 기업형첨단도시를 조성하여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빈틈없이 지원한다. 광주 군공항 종전부지를 획기적인 속도로, 호남권 반도체 첨단거점으로 조성한다.
- 도로·철도·공항 등 교통 인프라 중장기 투자 방향을 지방권 중심으로 설정하여 인프라 확충 계획을 연내 순차 발표하고, 가덕도·대구경북·새만금 등 지역별 신공항 건설과 지방 공항 활성화를 통해 균형발전을 선도한다.
- 행복도시는 국가상징구역 조성 착수와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추진을 통해 명실공히 균형성장의 상징도시로 육성하고, 새만금은 로봇·수소·인공지능(AI) 등 기업 투자를 통해 지방투자의 선도모델로 육성한다.

[개혁②: 국토교통 서비스 구조개혁]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혁

- 철도 이용은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바뀐다. 통합앱 구축 및 열차 통합 운영 등 코레일-SR 통합을 9월까지 완료하고, 철도 차량 수급 안정화를 위해 노후 차량 리모델링(280칸, ~'28) 및 신규 차량 발주(184칸, '27)를 추진하는 한편, 철도 차량 산업구조도 개선한다.
- 고속도로 휴게소는 국민과 입점업체 모두가 만족하는 공간으로 개선한다. 공공관리회사를 통해 직계약 구조로 전환하는 한편, 평균 33% 수준인 임대료는 8~9% 수준으로 낮춰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,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 품질도 높여 나간다. 도로·철도 전관문제도 확실하게 근절한다.
- 인천공항 주차장 부족 및 혼잡문제 개선을 위해 여객의 선호도가 높은 단기 주차장의 실 주차면수를 50% 확대(5,441 → 8,156면)하였고, '33년까지는 7천면 이상 증설한다.

[개혁③: 불법·편법행위 정상화] 투명하고 합리적인 제도 확립으로 공동체 신뢰 강화

- 국민의 주거 불안을 키우는 5대 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한다. 공인중개사 카르텔, 정비조합 불법행위, 실거주 의무 위반, 부동산 알박기, 소규모 쪼개기 개발 등 5대 부동산 불법행위를 집중 관리하고, 부동산 거래질서 왜곡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사와 대응을 지속한다.
- 정직한 국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 자동차보험 체계를 만든다. 단순 타박·염좌에 대해 8주를 초과하는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의료인의 검토 절차를 도입하여 보험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.
-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제재처분 수준을 상향(지급정지 기간 2배 연장)하고 상시점검 고도화 및 현장점검 강화를 추진하는 한편, 세관 전용 판독실 설치, 화폐 탐지 AI 기술 도입을 통해 외화 밀반출 단속을 철저히 한다(2분기 단속 성과 60%↑).

[개혁④: 일확행] 작은 일상부터 바꾸는 확실한 행정

- 대국민 공모 및 스타트업·민간협회 등과의 소통 정례화를 통해 국민체감형 과제를 발굴하여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. 특히, 국토교통부 ‘3대 청년 소통채널*’ 정기 활동 및 청년인턴 일확행 과제 제안을 통해 청년의 국토교통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.

* 2030 청년자문단(36명, 6분과), MZ보드(국토부 실무자 25명), 청년온라인패널(579명)

- 일확행 과제로 먼저, 중고차 시장을 더욱 투명하게 개선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중고차 거래 환경을 조성한다. 중고차 총액표시제(수수료 포함) 의무화, 차량 성능점검 기준 구체화, 판매자 하자보증 책임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“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”을 7월중 마련한다.
- 재건축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기준으로 추진한다. 공공보행 통로 미개방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공공성을 확보하고, 과도한 공공 기여시설과 고비용 복리시설 설치를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불필요한 사업비 증가를 줄여 나간다.

[전략①: 주거 안정] 모두가 집 걱정없이 살 수 있는 대한민국

-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주택을 더 빠르게 공급한다. 3기 신도시 등 주요 지구 착공시기를 1~2년 단축하고, 이주 지원·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정비사업 착공을 지원한다(「도정법」 개정). 비주택용지(상업 등)의 주택 용도 전환을 확대하고, 도심복합사업의 서울내 신규 후보지를 7월중 발표한다.
- 맞춤형 주거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청년·중산층이 선호하는 도심내 우수 입지에 고품질, 부담가능한 주택에서 장기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 유형을 신설하고, 청년층 특성을 고려해 소득·자산 연계 등 공공주택 지원체계를 개선한다.
- 전세사기 걱정 없는 임대차 환경을 만든다.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-후정산 제도 시행('26.11)에 맞춰 제도·체계를 정비*하고, 범정부 정보 연계 위험 진단 서비스를 제공('26.9, 안심전세앱)하는 한편, 임차인의 전세금을 전월세 안정화기구가 관리하여 전세보증금을 보호하는 안심신탁사업을 추진한다.

* 하위법령 개정('26.9), 원스톱 피해 지원 시스템 개발('26.10), 피해지원 조직·인력 확충('26.10)

[전략②: 포용 성장]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고 현장 노동자를 보호

- 건설현장의 안전과 공정한 근로환경을 강화한다. 지방 노후·취약시설물 정비 추진 및 해체공사 소주기 안전관리 제도 점검·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건설현장 안전을 강화하고, ‘발주자 직접지급제’ 의무화, 국토부 직권처분 도입, 페이퍼컴퍼니 근절 등을 통해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및 대금 체불을 근절한다.
- 운수종사자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차 안전운임제 영구화 및 품목확대를 추진하고, 택배종사자 적정 작업시간을 제도화하는 한편, 그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전세버스에도 유가보조금을 지급한다.
- 또한,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3천대를 보급하고, 역주행 사고 방지 시설 설치, 2차사고 예방 장치 도입*, 도로 지하차도 진입차단 시설 설치·관리 강화를 추진한다.

* (역주행) 색깔유도선·LED 표지판, (2차사고) 크루즈 컨트롤(ACC) 차량 감속 유도장치

[전략③: 교통 혁신] 어디서나 누구나 편리하게 누리는 교통서비스 제공

- 교통비 부담완화를 위해 모두의카드는 기후부 그린카드, 지방정부 무임교통카드와 연계하여 편의성을 제고하고, 환급 대상에 청소년(13~18세)을 추가하는 등 혜택 확대를 검토한다.
- 국가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 확대 및 수요응답형 버스(M-DRT) 활성화를 통해 광역교통 편의를 제고하고, 고속·시외버스 필수노선 도입 및 「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」 제정을 통해 교통 소외 해소 및 교통약자 보호를 추진한다.
- 지방관광 활성화를 위한 교통 혁신을 위해 지방공항을 외래 관광객 유치 거점으로 육성하고, 해외 신용카드 대중교통 직접 결제 등 외국인 편의 제고 및 관광객의 지역간 이동 편의를 위한 교통편 확충 등을 추진한다.
- 이를 위해 ‘관광형 대중교통 시범도시’를 지정(‘27)하고, 중장기 관광교통 정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를 정립한다.

[전략④: 미래 성장] 모빌리티 첨단산업 선도 및 건설산업 고부가가치화

- 자율주행 시대를 가속화하기 위해 광주 실증도시에 연내 실증차량 200대를 투입하고,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최초로 배터리 리스 차량 판매를 개시(‘26.10, 실증사업)한다.

- UAM 초기 상용화('28)를 위한 시범운용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한편, 실내외 공간에서의 이동로봇 상용화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.
- 해외건설 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기 위해 신규 펀드*를 조성하여 해외 국부펀드·국책은행, 글로벌 디벨로퍼 등과 공동 투자하고, 데이터 생산·유통·활용체계 구축, 건설 로봇틱스 활용 등 건설산업 첨단 대전환 전략을 마련한다.
- 또한, 모듈러 주택 활성화를 위해 「모듈러 특별법」 제정을 추진하고, 모듈러 공공주택 발주를 3배 확대('25 1천호→'26 3천호)한다.

□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“국민주권정부 2년차에 접어든 만큼 「대체 불가 대한민국」을 향한 본격적인 성장과 도약을 이뤄내야 할 중요한 시기” 라면서,

- “균형 발전, 주거 안정, 국민 안전, 교통 혁신, 미래 성장 등 핵심 과제에 대해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” 고 말했다.
- 특히, “조직 내부혁신에 더욱 속도를 낼 것”이라면서, “모든 직원에게 국토부의 조직 비전이 공유되고, 수평적 소통 문화가 정착되는 한편, 성과를 낸 직원에게 포상하는 체계를 확실하게 정착시킬 것”이라고 밝혔다.

※ 별첨: 국토교통부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핵심추진과제 1부.
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 기획담당관	책임자	과 장	소성환	(044-201-3201)
		담당자	서기관	김병채	(044-201-3197)
			사무관	황규오	(044-201-3205)
			주무관	김연우	(044-201-3204)

